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농촌주민 의식 및 정책 방향

조영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위원

choyj@cni.re.kr

본 연구에서는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다양한 공간적 재편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정책 사례연구와 주민의식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적 재편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공간적 재편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하였음

CONTENTS

1. 농촌마을 재생이론과 계획론
2.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
3. 공간적 재편에 관한 농촌주민 의식
4. 정책제언

요약

◀ ‘공간적 재편’이란 마을 공간인프라의 리모델링, 일부 또는 집단이전, 신규마을 조성 등 마을의 다양한 공간적인 측면의 재편을 의미하며, 일본의 ‘철퇴(撤退)’의 농촌계획론’도 공간적 재편의 하나의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공간적 재편에 관한 농촌주민 의식조사 결과,

- 마을 소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나, 본격적인 마을 소멸 논의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농촌마을 주민들은 의외로 행정적 재편 및 공간적 재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 다양한 공간적 재편에 농촌주민의 다수의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과소고령마을뿐만 아니라 일반농촌마을에서도 동일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재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함

- 농촌마을 모니터링·진단, 관리체계의 구축
- 경관저해요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
- 마을 유흥자원에 대한 활용성 제고
- 마을역사 아카이브 구축
- 일부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재편부터 적용 확대
- 향후, 거주지 이전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공간적 재편방안 연구 진행 필요

01

농촌마을 재생이론과 계획론

1. 농촌마을 재생과 재편의 관점¹⁾

- 재생의 관점

- 근대 농촌마을의 쇠퇴와 함께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계획의 관점임
-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커뮤니티와 공간 등을 대상으로 하고, 그 원래의 기능이나 형태를 그대로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 한다는 측면에서 '재편'의 개념과도 구별됨
- 마을의 소멸은 곧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소중한 전통과 고향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마을 재생의 필요성 주장

- 재편의 관점

- 기존의 '재생'의 관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기됨
-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커뮤니티와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의 복수의 커뮤니티나 공간 등을 아울러 그 기능이나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재생'의 관점과 구별됨
- 마을의 독자적인 재생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여러 마을이 기능을 보완하는 재편의 필요성을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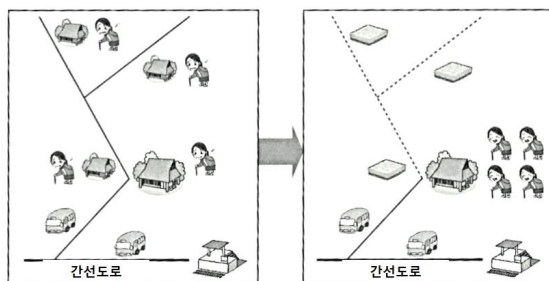
- 재편의 방법으로는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을 들 수 있음

- 행정적 재편 : 인근 마을간 통합·합병이나 중심 마을로 배후 마을의 흡수, 전체적인 행정구의 개편·변경 등 행정구역의 재편을 의미
- 기능적 재편 : 초등학교 통학군 등으로 복수의 마을이 새로운 광역조직을 형성하거나 마을의 기능 분담 또는 복수의 마을에서 주민커뮤니티를 통합하는 등의 재편을 의미
- 공간적 재편 : 마을 공간인프라의 리모델링, 일부 또는 집단이전, 신규마을 조성 등 마을의 다양한 공간적인 재편을 의미

1) 「조영재 등(2018), “한계마을정책 개발을 위한 최근 일본의 한계집락 관련 논의 및 정책 동향 연구, 농촌계획, 제24권 제1호, 21-31」를 바탕으로 재정리

2. 일본의 ‘철퇴(撤退)의 농촌계획론’²⁾

- 공간적 재편의 논리 중 하나인 ‘철퇴(撤退)의 농촌계획론(이하 철퇴론)’ 등장
 - 하야시나오키(林直樹, 2010) 등이 주장한 ‘공간적 재편’의 논리로, 이들은 ‘대다수의 과소마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미래를 위한 선택적인 철퇴(撤退)’의 방법으로 ‘철퇴론’을 제안하고,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멸 시키는 ‘소극적인 철퇴’보다 집락의 이전 등의 의한 ‘적극적인 철퇴’가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
 - 그러나 ‘재생’의 관점의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철퇴론의 근거 논리
 - 행정투자의 효율성 : 인구감소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행정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행정투자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임
 - 삶의 합리성 :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거주지를 인근 중심지 등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임



[행정투자의 효율성]



[삶의 합리성]

2) 「조영재 등(2018), “한계마을정책 개발을 위한 최근 일본의 한계집락 관련 논의 및 정책 동향 연구, 농촌계획, 제24권 제1호, 21-31」를 바탕으로 재정리

02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

1. 국내 관련 정책 사례

- 공간적 재편 관련 국내정책 사례로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신규마을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새뜰마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이 있음

사업명	내 용
농촌 중심지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의 기능 확충과 함께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대로 중심성이 높은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
기초 생활 거점 (농림축산식품부)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
신규마을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중심지 인근을 중심으로 고령화·공동화·귀농 귀촌 증가 등에 대응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공간 및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넓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 촉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용자주택),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농어촌 슬레이트처리사업)
농어촌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에 거주하는 둘 이상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 생활이 가능한 시설 또는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새뜰마을사업 (국토교통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18.02.09.)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2. 일본의 관련 정책 사례

- 일본의 정책사례로는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각부의 ‘생애활약마을의 형성’, 총무성의 ‘정주자립권구상’, 국토교통성의 ‘작은거점만들기’, ‘후루사토 집락생활권 형성 추진사업’ 등이 있음

사업명	내 용
생애활약마을의 형성 (내각부)	동경권을 시작으로 하는 지역의 중고령자가 희망에 따라 지방으로 이주하여 다양한 지역주민과 교류하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 및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정주자립권구상 (총무성)	중심시와 인접 시정촌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협력을 통하여 권역 전체가 필요한 생활기능 등을 확보하는 ‘정주자립권구상’을 추진함으로, 지방의 안정적인 정주기반을 형성 하는 정책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 추진 사업 (총무성)	과소지역 시정촌 등을 대상으로 과소지역 산업진흥, 생활의 안전·안심 확보 대책이나 정주촉진 대책 등 다양한 대응책을 지원하는 사업
과소지역 등 집락네트워크권 형성 지원사업 (총무성)	집락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거점집락을 중심으로 주변 복수의 집락을 하나로 통합하는 ‘집락네트워크권’(작은거점)에 있어서 주민의 삶을 지지하는 생활지원시스템의 구축이나 일자리를 계승·창출하는 활동을 지원
작은거점 만들기 (국토교통성)	초등학교 통학구역 등 복수의 집락이 모인 기초적인 생활권 중에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나 지역활동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자, 서비스의 순환을 도모함으로써 생활을 지탱하는 새로운 지역운영의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
‘후루사토 집락생활권’ 형성 추진사업 (국토교통성)	지방의 조건불리지역에 있어서 거점집락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서비스나 지역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작은 거점’의 형성을 위해 시정촌 등이 추진하고 생활권의 미래상, 전체구상의 검토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시설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지방의 집락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농림수산성)	지방의 창의적인 노력을 살려 지역주민의 합의형성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활성화 계획에 기초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 지원교부금’을 교부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 (농림수산성)	농업의 생산조건 등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에 있어 농업생산기반과 농촌생활환경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산간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농지중간관리기구제도 (농림수산성)	향후 10년간 농업후계자의 농지이용이 전체 농지의 80%를 점유하도록 농업구조를 개편(농지의 집적·집약화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집적뱅크)를 도도부현에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

03

공간적 재편에 관한 농촌주민 의식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 실태파악, 공간적 재편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 조사내용

- ① 대상자 일반사항 : 성별, 연령, 주소, 직업, 마을내 역할, 생계유지 주요수단 등
- ② 대상마을 일반현황 : 인구현황 및 변화, 빈집 및 휴경지 현황, 마을 공동체 현황
- ③ 마을 소멸에 관한 의식 : 인구규모 변화, 마을소멸 가능성, 해당마을 소멸에 대한 의식, 마을소멸 방지 노력, 농촌마을 소멸에 대한 의식, 소멸방지 대책, 소멸방지 주체 등
- ④ 공간적 재편에 대한 의식 : 이주 의향, 농촌 거주 이유, 외지인의 마을전입에 대한 의식, 신규마을 조성에 대한 의식, 해당마을 주민의 이주에 대한 의식, 이주에 필요한 조건 등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8년 8월 3일 ~ 9월 2일(1개월간)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현장방문 면접조사
- 대상지역 : 금산군 257개 행정리
- 대 상 자 : 마을이장 등 마을당 대표자 1명, 총 257명

2. 조사결과

- 조사 대상마을의 대부분(73.1%)이 200명 이하의 인구규모를 갖고 있으며, 이중 인구 50명 이하의 마을도 8개 마을로 나타남
 - 마을내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평균치는 32.7%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8세 이하 인구 '0(제로)'인 마을은 3개 마을, 최근 5년간 전입인구 '0(제로)'인 마을도 2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의 마을에서 고령화 및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이 마을소멸에 대해서는 소멸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소멸되더라도 먼 훗날에 발생할 일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이하 과소고령마을) 소멸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마을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81.3%) 원하지 않고 있지만, 과소고령마을 일수록 소멸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을소멸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멸될 마을이라면 기존마을을 소멸시키고 전혀 새로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38.1%)과 마을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주민 삶의 질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37.7%)이 가장 많았음
 - 일부 소멸될 때까지 끝까지 소멸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16.3%)과 어차피 소멸될 마을이라면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7.8%)도 제시됨
-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는 인근 마을과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행정적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행정적 재편)는 의견(34.0%), 2개 이상의 마을을 묶어 활성화된 마을이 인근 침체된 마을을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기능적 재편)는 의견(23.5%), 마을을 전면 재개발하고 적극적인 외부인구를 유치하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공간적 재편)는 의견(22.4%)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쇠퇴하고 있는 농촌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집과 토지,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농사 등)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62.6%)과 고향 또는 지속적으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53.7%)이 가장 많았음

- 공간적 재편에 있어, 마을 일부를 정비 또는 리모델링하여 외지인이 이주해 들어와 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소멸을 앞둔 마을을 외지인 중심의 전혀 새로운 마을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14.8%는 반대의견을 보임
 - 반대 이유로는 원주민의 소외감, 신·구주민의 갈등, 마을역사·전통의 소멸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함
- 소멸가능성이 높은 오지마을을 인근 중심지 등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6%가 동의하였으나, 인구규모가 작은 마을일수록 반대 경향을 보임
 - 또한, 이러한 오지마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0%가 대규모 투자보다는 삶의 질 향상 등의 최소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멸을 앞두고 있는 마을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 낭비라는 의견도 27.2%에 달함
- 실제 응답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 소멸을 앞두고 있다고 할 경우, 마을주민을 인근 중심지 등으로 이주해 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11.7%는 반대의견을 보임
 - 반대의견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문제,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을 제시하였고, 이주할 경우 기존 소유 토지·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이전비(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등의 경제적 측면의 지원을 조건으로 제시함
-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7%가 이주의사를 보였으며, 특이하게 마을의 인구규모가 크고 고령비율이 낮을수록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시사점

-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가능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과소화·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둘째, 휴경지, 빈집·폐가 등에 대해 마을주민의 대부분이 경관저해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관련주체의 참여 및 의식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함
 - 셋째, 마을공동급식 등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넷째, 마을 소멸에 대해 전혀 부정적인 시각만을 갖고 있지는 않고, 소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나, 본격적인 마을 소멸 논의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농촌마을 주민들은 의외로 행정적 재편 및 공간적 재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여섯째, 일본에서 ‘철퇴의 농촌계획론’이 제시한 ‘행정투자의 효율성’과 ‘삶의 합리성’의 반대 논리로 제기된 ‘삶의 철학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을 떠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제기됨
 - 일곱째, 다양한 공간적 재편에 대해 의외로 농촌주민의 다수의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과소고령마을뿐만 아니라 일반농촌마을에서도 동일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공간적 재편의 문제로 제기된 마을의 전통·역사의 소멸, 원주민의 소외, 이주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신·구 주민의 화합 등 새로운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공간적 재편의 적용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04 정책제언

1. 공간적 재편의 기본방향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적 재편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첫째, 마을의 과소화·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둘째, 공간적 재편을 포함한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1차적 주체는 실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셋째, 공간적 재편의 검토 전에 재생 또는 기능적·행정적 재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 넷째, 공간적 재편은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 다섯째, 공간적 재편에 앞서, 반드시 기존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공간적 재편은 다양한 하드웨어(H/W)적·소프트웨어(S/W)적인 여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간적 재편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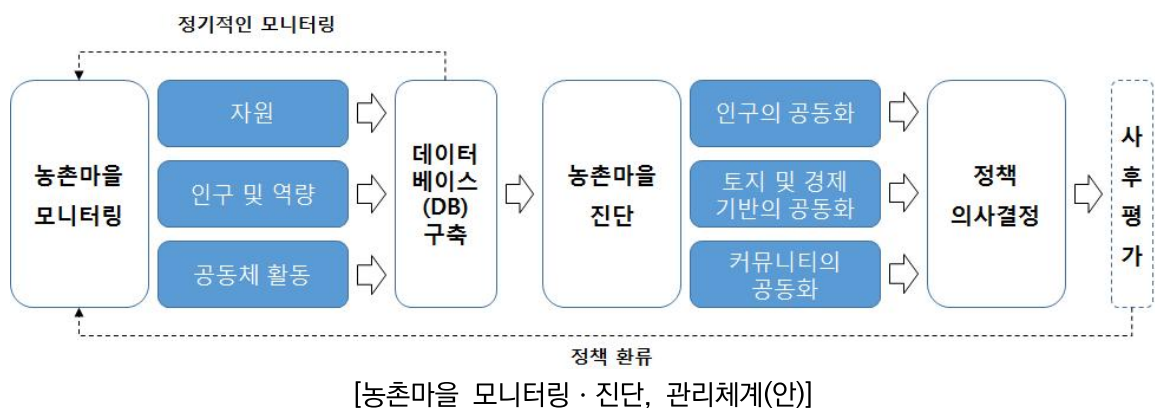
- ① 과소화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
- ②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1차적 주체는 실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 ③ 공간적 재편 검토 전에 재생, 기능적·행정적 재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 ④ 공간적 재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커뮤니티 활성화
- ⑤ 기존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가치 제고
- 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공간적 재편의 기본방향]

2. 향후 정책과제

• 농촌마을 모니터링·진단, 관리체계의 구축

- 모든 마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진단,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마을의 인구, 자원, 역량,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농촌마을을 진단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에 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또한, 관련정책 추진 이후 중간평가, 사후평가 개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후 후속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



• 경관저해요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

- 경관저해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소유주에게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공간을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거나, 공공의 자금 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정비하도록 유도
- 법률제정이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마을경관을 해치는 행위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경관조례 및 경관협정의 제정이 필요

• 마을 유희자원에 대한 활용성 제고

- '체재형 주말농장'의 수정형 모델로 빈집 등의 기존시설 정비 또는 신축을 통하여 단지형 또는 독립된 형태의 '체재형 주말별장'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의 의향이 있는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임대해 주는 등 귀농·귀촌의 여건을 마련
- 유희농지, 경작포기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의 한계농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으로 토지 자원화 대책을 마련
- 유희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토지주택뱅크'를 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중간지원조직 등에 토지주택뱅크를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창구를 설치

- 마을역사 아카이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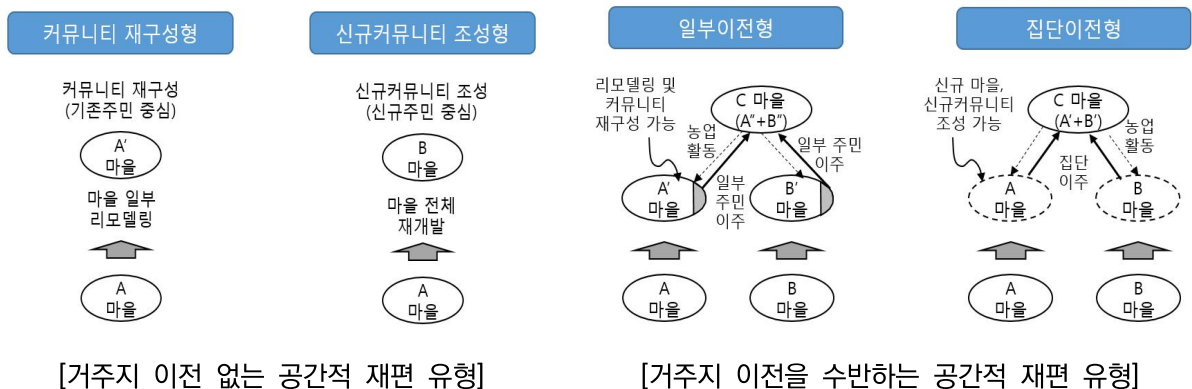
- 소멸위기의 우려가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공간적 재편의 추진 예정인 마을 등을 대상으로 마을이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마을역사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계승하도록 함

- 일부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재편부터 적용 확대

- 신축의 형태 보다는 기존의 마을회관, 노인회관, 기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중심으로 증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고령자 및 소외계층을 케어 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확충
- 기존의 '농어촌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되 공동생활의 방식과 형태를 보다 다양화 함 (단독입주형, 공동생활형 등)
- 마을내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기존 마을주민이 아닌 새롭게 외지인을 대상으로 임대 (또는 매매)해 주도록 함

- 향후, 거주지 이전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공간적 재편방안 연구 진행 필요

- 일부주민이 아닌 전체 주민 또는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재편은 크게 거주지 이전 없는 공간적 재편과 거주지 이전을 수반하는 공간적 재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편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자료: 조영재 등(2014), 열린충남 vol.83을 참고하여 재구성

- 조영재 외,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3-07
- 조영재 외, 2014,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4-07
- 조영재 외, 2015, 농촌마을의 공동화와 과소·고령화 현상의 관련성 연구 - 충남 금산군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vol.24, no.4, pp.85-94
- 조영재 외, 2018, 한계마을정책 개발을 위한 최근 일본의 한계집락 관련 논의 및 정책 동향 연구, 농촌계획, vol.24, no.1, pp.21-31
- 조영재, 2018, 인구감소시대, 한계마을의 다양한 재편 가능성, 열린충남, vol.83, pp.24-29
- 秋津元輝, 2013, 「撤退」しない農村を支える論理、農業と経済、第79巻1号、pp.36-45
- 大西隆 外, 2011, これで納得！集落再生-「限界集落」のゆくえ、ぎょうせい
- 大野晃, 2005, 限界集落—その実体が問いかけるもの、農業と経済、第71巻3号、pp.5-13
- 大野晃, 2008, 限界集落と地域再生、北海道新聞社
- 小田切徳美, 2009, 農山村再生-「限界集落」をこえて、岩波書店
- 小田切徳美, 2011, 農山村再生の実践、農文協
- 小田切徳美, 2014, 農山村は消滅しない、岩波新書
- 大森けんいち, 2005, 集落消滅の社会的損失、農業と経済、第71巻3号、pp.25-34
- 林直樹 外, 2010, 撤退の農村計画-過疎地域からはじまる戦略的再編、学芸出版社